
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

2024. 3.

목 차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상속세율 인하 | 2 |
| 2.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| 4 |
| 3.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·한도 확대 | 5 |
| 4.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 | 7 |
| 5.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| 8 |

법인세법

| | |
|--|----|
| 1. 법인세 인하 | 10 |
| 2. 최저한세제도 개선 | 11 |
| 3.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| 12 |
| 4.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법인까지 확대 | 14 |
| 5. 중소·중견기업 해외자회사 대상 매출채권 지연 회수 과세 완화 | 15 |

조세특례제한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| 17 |
| 2. R&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| 19 |
| 3.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| 21 |
| 4.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| 23 |
| 5.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(방역·방제기술) | 25 |

목 차

조세특례제한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6.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| 26 |
| 7.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| 27 |
| 8.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| 28 |
| 9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| 30 |
| 10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행령 보완 | 31 |
| 11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| 32 |
| 12.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| 33 |
| 13. 일몰 예정 조세특례제도 기한 연장 | 34 |
| 14.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 | 35 |

기타 세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근로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재검토 | 37 |
| 2.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건의 | 39 |
| 3.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지원 기준 완화 | 40 |
| 4.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제외 기준 완화 | 42 |
| 5.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 연장 | 44 |
| 6.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페로실리콘(FeSi) 포함 | 45 |
| 7.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과표구간 상향 | 46 |
| 8.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조정 | 47 |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1

상속세율 인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(50%)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,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기업을 승계하기보다 매각을 먼저 고려하는 상황 발생

<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>

| 세율 | 국가 | 세율 | 국가 | 세율 | 국가 |
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|
| 55% | 일본 | 30% | 벨기에, 독일 | 10% | 아이슬란드, 튀르키예 |
| 50% | 한국 | 25% | 칠레 | 7% | 폴란드, 스위스(칸톤 레벨) |
| 45% | 프랑스 | 20% | 그리스, 네덜란드 | 4% | 이탈리아 |
| 40% | 영국, 미국 | 19% | 핀란드 | 0% |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호주, 오스트리아, 캐나다, 에스토니아, 이스라엘, 멕시코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스웨덴, 헝가리, 체코, 라트비아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 |
| 34% | 스페인 | 15% | 덴마크 | | |
| 33% | 아일랜드 | 14% | 슬로베니아 | | |

* 국회입법조사처,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, '21.10.1

-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'21년 상속세수는 6조 9,447억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52% 증가했으며,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해서 상승¹⁾

*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(억 원(%)) : ('11) 12,586(0.7) → ('16) 19,949(0.9) → ('21) 69,447(1.9)

- '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한국의 상속·증여세 부담률은 0.5%로 OECD 평균인 0.1%의 다섯 배에 달하며,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상속·증여세 부담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

* 주요국 명목 GDP 대비 상속·증여세 비중('21년 기준, 2023 대한민국 조세)

: 프랑스 0.7% 한국 0.7% 일본 0.5% 독일 0.3% 영국 0.3% 미국 0.1% OECD 평균 0.2% 등

1) '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 2,603억 원으로 '2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가 폭이 훨씬 크게 도출되나, 해당 연도는 삼성전자 오너 일가 상속세 결정세액(12조 원)을 포함하여 급증한 것을 고려해 추이에서 제외

-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

<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>

| 상속세 유지 국가(23개국) | 상속세 폐지 국가(15개국)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산취득세(19) : 벨기에, 칠레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일본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폴란드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위스, 튀르키예 • 유산세(4) : 덴마크, 대한민국, 영국, 미국 * (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) 슬로베니아 (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)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슬로베니아, 헝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본이득세(4) :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스웨덴 • 추가소득세(3) : 라트비아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 • 비과세(7) : 오스트리아, 체코, 이스라엘, 멕시코, 노르웨이, 슬로바키아, 에스토니아 • 인지세(1) : 포르투갈(직계가족 면제) |

* 국회입법조사처,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, '21.10.1

-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고,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* 등을 도입하여 상속세제를 개편할 필요

* 전체 유산에 과세하지 않고, 유산을 상속인 수로 나눈 뒤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는 방식

- 호주는 '77년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으며, 스웨덴도 자국 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영국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자본이득세를 도입

* '84년 스웨덴 제약회사 아스트라AB가 당시 높은 상속세 부담(실효세율 70%)으로 인해 영국의 제네카에 회사를 매각

□ 건의내용

- (1안)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(15%) 수준으로 인하

* 전체 상속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

- (2안) 상속 시점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 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

* 상속세 전반에 대해 일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, 기업을 이전하는 승계에만 자본이득세 방식을 선 적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%를 할증평가(단, 중소 및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중견 제외)하여 상속세 부과
 - *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
-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할 경우 최고 60%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
 - * 상속세 최고세율 50%,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%
- 할증평가는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
-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%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
 - * 기업승계 시 애로사항 : **상속·증여세 등 조세부담 62.4%**, 엄격한 기업승계 요건 7.8%, 복잡한 지분구조 7.5% 순 (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
- 특히,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*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의 우려가 존재
 - *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(평가기준일)의 시가(時價)에 따름 (상속세 및 증여세법 §60)

□ 건의내용

-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(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)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포지티브 방식*으로 규정하고, 최대 600억 원**까지 공제

*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

**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, 20년 이상 400억 원, 30년 이상 600억 원

- 오랜 기간 가업을 영위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 제도 활용이 불가능

<제조업-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>

| 광업 (05~08) | 제조업 (10~33) | 건설업 (41~42) 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 |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 | 교육서비스업(85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전체 | 전체 | 전체 | 연구개발업(70),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(714) 등 5개 업종 |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,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 등 7개 업종 | 유아 교육기관(8511), 사회교육시설(8564) 등 4개 업종 |

- 특히, 서비스업은 동종·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

| 사례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사는 인력 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, 청소,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·관리하고 있음(표준산업분류상 "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"에 해당) ○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"소독,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(74220)"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(단, "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(74212)", "고용알선업(75110)"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)으로, 유사·동종사업("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", "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" 등)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○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, 일반 골프장은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|

-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매우 저조하며, 특히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

-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5,200억 원*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30%로 가정해도 상속 규모가 1,560억 원에 달해 가업상속공제 활용 없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움

*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총액('22년 결산 기준)으로 같음

<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>

| 구 분 |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 '16 | '17 | '18 | '19 | 평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한국 | 가업상속공제 건수(개) | 46 | 58 | 70 | 68 | 67 | 76 | 91 | 103 | 88 | 74 |
| | 가업상속공제 금액(억원) | 325 | 343 | 933 | 986 | 1,708 | 3,184 | 2,226 | 2,344 | 2,363 | 1,601 |
| 독일 | 가업상속공제 건수(개) | 5,123 | 6,124 | 8,061 | 10,141 | 11,085 | 11,885 | 10,747 | 10,311 | 11,368 | 9,427 |
| | 가업상속공제 금액(백만유로) | 4,412 | 3,733 | 3,713 | 6,439 | 4,753 | 5,208 | 6,881 | 4,029 | 3,047 | 4,691 |
| 영국 | 2011-2018년 평균 2,620건, 1,801백만파운드 | | | | | | | | | | |

* 코스닥협회, 「중소·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」, '21.5월

-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및 한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승계기반 조성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

*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91.1명을 고용하는 데 반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833명을 고용(중견기업 통계, '22년도 결산 기준)

□ 건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제외 업종*만 별도 규정

*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 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
-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확대

- (현행)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→ (건의) 전체 중견기업

-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

- (현행) 최대 600억 원 → (건의) 최대 1천억 원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승계 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준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10년 이상 일정 지분율* 이상을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

*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: 상장 30%→20%, 비상장 50%→40% ('23.2월 개정)

- 기업 상장 시 예비심사에서 주식분산을 심사요건*으로 정해 상장 기업의 대주주 지분율 감소는 불가피하며, 상장 이후 기업 경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분산효과는 더욱 심화

* 한국거래소, 2024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

- 대기업 대비 자체 자본 여력이 부족하고, 중소기업 대비 정책금융 활용이 어려운 중견기업은 상장을 적극적으로 활용*하고 있어, 가업 상속 시 최대주주 등 지분확보 요건 충족에 애로

* 상장시장별 중견기업 비중('24.2월 기준, 기업공시채널kind)

①코스피 기업 810개사 중 중견기업 55.6%(450개사)

②코스닥 기업 1,605개사 중 중견기업 29.6%(475개사)

사례

상장 중견기업 E사는 최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으나,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20%에 미달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불가함

-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 분쟁 우려 증가

□ 건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장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금전, 유가증권,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*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,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

* 금전, 유가증권, 납세 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, 토지,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 등

-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, 과세당국에서 물납 주식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까다로운 절차*를 마련한 탓에 실질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

* 국세청, 캠프,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'물납허가협의체' 운영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관리

- 비상장 중견기업(83.1%)*은 세 부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 위협 우려

* **비상장 4,647개(83.3%)**, 코스피 450개(8.1%), 코스닥 475개(8.5%), 코넥스 4개(0.1%)

-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

-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

*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(홍석준 의원안, 의안번호 제2104118호)

□ 건의내용

-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

*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 기준 별도 마련

(예시)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, 불성실 납부 이력이 없는 중소·중견기업

법인세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.4%로 G7 평균 26.3%, OECD 평균 23.1%를 상회
 - 미국, 일본,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
 - * 최고세율('17년→'22년): OECD 평균 24.8 → 23.1, G7 평균 31.0 → 26.3, 한국 24.2 → 27.5, 미국 38.9 → 25.8, 일본 30.0 → 29.7, 프랑스 44.4 → 25.8, 영국 19.0 → 19.0, 이탈리아 27.8 → 27.8 (국회예산정책처, 2023년 대한민국 조세)
 - 한국은 '18년부터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(25%)하고 '23년부터 24%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 추세에 역행
 - *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구간별 1%씩 인하되었으나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
- 한국의 2021년 기준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*은 3.8%로 OECD 평균인 3.1%에 비해 높은 수준
 - * 캐나다 3.9%, 일본 4.3%, 영국 2.6%, 프랑스 2.5%, 이탈리아 1.9%, 독일 2.4%, 미국 1.6%
-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 유지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*시키고 해외로 자본유출**을 심화
 - * 설비투자지수(통계청) : ('15년) 100.0 ('16년) 101.7 ('17년) 116.4 ('18년 3천억 원 구간 신설) 112.1 ('19년) 105.8 ('20년) 112.0 ('21년) 122.7 ('22년) 126.7 ('23년) 119.7
 - ** 자본유출(해외직접투자-외국인직접투자) : '17년 220.7억 달러→ '22년 467.2억 달러

□ 건의내용

- 주요국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 인하
 - ①과표 2억 원 이하 5%, ②2~200억 원 이하 10%, ③200~3,000억 원 이하 15%, ④3,000억 원 초과 20%

<법인세 최고세율 1% 인하 시 경제적 효과>

| | 총고정자본형성 | 취업자 수 | GDP |
|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단기 | 0.46% | 0.13% | 0.21% |
| 장기 | 2.56% | 0.74% | 1.13% |

* 김학수,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『한국경제포럼』 제10권 제3호, 한국경제학회 2017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법인세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상황
 - * 최저한세율 : 중소기업 7%, 중견 1~3년 차 8%, 4~5년 차 9%, 그 외 중견·대기업 10~17%
 - 최저한세 적용에 의한 증가세액은 중소기업은 8천만 원 수준이 반면, 일반법인(중견·대기업)의 경우 평균 53.3억 원으로 조세부담 급증
 - *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「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」, '18.2월
- 최저한세제로 인해 각종 세제지원의 실익 없이 이월공제만 쌓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족
 - 특히,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R&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금액이 줄어들고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
-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, 헝가리, 룩셈부르크, 오스트리아 4개국에 불과

□ 건의내용

-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인하
 - (현행) 중견기업 1~3년 차 8%, 4~5년차 9%, 6년 차 이상 10~17%
→ (건의안) 전체 중견기업 8%
- 중견기업의 R&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
 - *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R&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% (중소기업 등*은 100%)를 한도로 이월하여 공제
 - * 중소기업, 회생계획·기업개선계획·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기업, 사업재편기업 등
 - * 이월결손금: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며, 이러한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금액
- '22년 영리법인의 매출액, 영업이익률, 부채비율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규모와 관계없이 전년 대비 악화

<영리법인의 주요 경영성과지표(단위: %)>

| 구 분 | | 대기업 | | | 중소기업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2021 | 2022 | 증감 | 2021 | 2022 | 증감 |
| 성장성 | 매출액증가율 | 15.5 | 15.5 | - | 19.2 | 14.4 | -4.8 |
| | 총자산증가율 | 9.0 | 8.0 | -1.0 | 19.7 | 12.6 | -7.1 |
| 수익성 | 매출액영업이익률 | 7.0 | 5.2 | -1.8 | 3.5 | 3.5 | - |
| | 매출액세전순이익률 | 8.0 | 5.2 | -2.8 | 4.4 | 3.7 | -0.7 |
| 안정성 | 부채비율 | 99.3 | 101.2 | 1.9 | 169.2 | 171.3 | 2.1 |
| | 차입금의존도 | 23.9 | 25.0 | 1.1 | 41.2 | 42.1 | 0.9 |

* 한국은행, 2022년 기업경영분석, '23.10월

- 중견기업 또한 전체 5,576개 사 중 27.3%에 달하는 1,523개 사가 '22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* '22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

- '23년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역대 최저에 가까운 1.4%(한국은행 발표)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기업의 경영성과는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

-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, 위기상황에서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할 필요

- 제도 취지가 위기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이고, 과세 이연에 가까워 세수에 영향이 적은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할 요인 부족
- OECD 38개국 중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기간을 모두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, 일본, 헝가리 등 6개국에 불과
 - *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결손금 공제 개선방안 연구, '23.7월
 - ① 공제한도 없는 국가: 호주, 캐나다, 이스라엘, 멕시코, 스웨덴 등 20개국
 - ② 공제기한 없는 국가: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21개국
- OECD 회원국 제도운영에 맞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또는 기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독려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(모든 기업 동일하게 100% 적용)
-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폐지(무기한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으나,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을 구분정리하고,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승계한 결손금 공제 가능
- 합병법인은 인수대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운영비용, 법인세까지 현금 유출이 다중으로 발생해 유동성 악화, M&A 장벽으로 작용
 -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발생소득 없이 연구개발비·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결손금 공제가 어려워 인수 초기 비용 부담 과도
- '20년 이후 대내외 경기 부진 및 원가상승,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부실 징후기업이 지속해서 늘어나 M&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
 - * 연도별 부실징후기업 수(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, 금감원)
: ('20년) 157개 사 → ('21년) 160개 사 → ('22년) 185개 사 → ('23년) 231개 사
 - '23년 부실기업 수(추정치)는 4,255개 사로 '22년에 비해 10.3%가 늘어났으며, 최근 5년('19년~'23년) 중 가장 높은 수치
 - * 기업부실예측모형을 통한 '24년 부실기업 추정 추이(한국경제인협회, '24.1.31):
('19년) 2,508개 사, ('20년) 3,077개 사, ('21년) 4,012개 사, ('22년) 3,856개 사, ('23년) 4,255개 사
- 적격합병 시 초기 부담을 경감해 한계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촉진하고, 일자리 유지 및 연구개발 활동을 독려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의 법인세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허용
 - * (예시) 인수 후 3년간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법인세액에 대해 피합병법인 결손금 공제를 허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은 내수 시장의 한계,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판매 및 현지 생산 등을 진행
- 중소·중견기업은 해외 인지도 및 신용이 낮아, 해외 자회사가 현지 은행·기관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모기업과의 거래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
- 해외 자회사에 설비를 납품 시 운송·통관·승인(고객사) 등의 절차에 6개월, 이후 설비 가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가 어려움
 - 매출채권 회수 지연은 제3자 거래처와 비교하여 판단하는데, 신설 법인인 자회사와 달리 기존 거래처는 글로벌 우량회사인 경우가 많아 회수기일이 단기라 자회사 거래와 비교 시 문제가 발생
- 법인세법은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을 대여로 간주하고,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있어 모법인의 과세 부담이 심화
-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,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·중견기업에 한해 과세를 경감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중소·중견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(외화미수금)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과세 경감 규정 마련
 - * (예시) 해외 자회사 설립 후 안정적인 경영궤도에 오를 때까지 설립 초기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기준일 수를 2~3년으로 산정(현재 제3자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 60일~90일 정도를 적용)

조세특례제한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R&D 및 설비투자,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세제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또는 5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

<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>

| 중견기업 범위 | 세제지원 내용 |
|----------------|--|
| 매출액 5천억원 미만 |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가업상속공제,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,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, 특허보세구역 특례, |
| 매출액 3천억원 미만 | -(R&D·투자 등) 통합투자세액공제,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, 신·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경감,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,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-(고용) 통합고용세액공제, 고용증대세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,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 지원 등 -(기타)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,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,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|

-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을 매출액에 따라 재차 축소하는 것은 성장 기피를 유발하고 중소기업→중견→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심화

- 중견기업→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* 1순위는 조세부담이며,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**은 18.3%로 중소기업(13.1%)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(17.5%), 상출집단 소속 기업(18.0%) 보다는 높은 수준

*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: **조세혜택 61.6%**, 금융지원 15.7%, 판로규제 20.0% 順 (중견련, 2023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** 법인세 실효세율('21년 신고기준) : 전체 18.4%, 상출 19.2%, **중견 19.6%**, 중소기업 14.4%, 기타 21.7%(국회예산정책처, 2023 대한민국 조세)

- 중견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여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고,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
-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.6%가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R&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차등지원 폐지가 시급

< 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(%) >

| | R&D세액공제 | | | | 통합투자세액공제(시설투자 등)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당기분 | | | 증가분 | 당기분 | | | 증가분 (추가공제한도) 기본공제액의 200% |
| | 중소 | 중견 | 그 외 | | 중소 | 중견 | 그 외 | |
| 일반연구개발 | 25 | 8~15 | 2 | 중소 50, 중견 40, 그 외 25 | 10 | 5 | 1 | 3 |
| 신성장·원천기술 | 30~40 | 25~40 | 20~30 | | 12 | 6 | 3 | 3 |
| 국가전략기술 | 40~50 | 30~40 | 30~40 | | 25 | 15 | 15 | 4 |
| | | | | | | | | |
| 중견 적용범위 |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| | | |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| | | |

- 중견기업은 '23년 경기불황에도 R&D 및 설비투자가 각각 9.4조원, 31.9조원, 고용인원 158.7만명 등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매출액 기준 폐지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

*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및 실태조사, 중견련

□ 건의내용

- (1안)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
- (2안) R&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폐지
- (현행) R&D: 매출액 5천억 원 미만/시설투자: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
(건의) 전체 중견기업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
 - (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(당기분)) 중소 25%, 중견(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) 8~15%, 대기업 최대 2%
 - (국가전략기술) 중소 40~50%, 대·중견 30~40%
-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이나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, 우주·항공,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

* 분야별 기술 수준('20) :

[한국] 전체 80.1, 우주항공해양 68.4, 생명보건의료 77.9, 에너지자원 80.2, ICT·SW 83.0

[중국] 전체 80.0, 우주항공해양 81.6, 생명보건의료 78.0, 에너지자원 81.6, ICT·SW 85.7

<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>

| 구 분 | 한국 | | 중국 | | 일본 | | EU | | 미국 |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| '18 | '20 | '18 | '20 | '18 | '20 | '18 | '20 | '18 | '20 |
| 기술수준(%) | 76.9 | 80.1 | 76.0 | 80.0 | 87.9 | 87.3 | 94.8 | 95.6 | 100.0 | 100.0 |
| 기술격차(년) | 3.8 | 3.3 | 3.8 | 3.3 | 1.9 | 2.0 | 0.7 | 0.7 | 0.0 | 0.0 |
| 기술수준 그룹 | 추격 | 추격 | 추격 | 추격 | 추격 | 추격 | 선도 | 선도 | 최고 | 최고 |

*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2020년 기술수준평가, '21.4월

-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79.1%*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기업 중심의 R&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

*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(KISTEP,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) :

한국 79.1% 미국 75.3% 일본 78.7% 독일 66.6% 프랑스 66.2% 영국 67.4% 중국 76.6%

- 한편,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

<중견기업 R&D 투자 추이>

| 구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계획 | 2024년 계획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R&D 투자금액(억원) | 77,213 | 84,443 | 94,102 | 94,269 | 96,296 |

* 중견련, 중견기업 실태조사(각 연도별)

- 그러나, 중소기업→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*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에 애로

* 중소기업 25% → 중견 1~3년 차 15% → 중견 4~5년 차 10% → 중견 6년 차 이상 8%

- 중견기업→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요인* 1순위는 조세부담으로, 중견기업은 공제율 축소에 최저한세까지 적용되어 체감 실익이 급감

*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: 조세 혜택 61.6%, 금융지원 15.7%, 판로규제 20.0% 順 (중견련, 2023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-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,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&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

- R&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→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, 민간 중심의 R&D 투자 기반 마련

*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% 상향 시, 매년 8조 8,48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,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,187명, 99,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(한국재정학회,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, '19.2월)

□ 건의내용

- 일반 R&D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상향

- (대 상) 매출 5천억 원 → 2조 원 미만으로 확대

- (공제율) 대·중견기업 공제율 5%씩 상향

* (현행) 중소 25%, 중견 8~15%, 대 2% → (개정안) 중소 25%, 중견 13~20%, 대 7%

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: 35~45%

* (현행) 중소 40~50% 대·중견 30~40% → (개정안) 중소 40~50%, 중견 35~45%, 대 30~40%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이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중소 30~40%, 중견* 25~40%, 그 외 기업 20~30%를 법인세에서 공제('24.12.31까지)

*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

- 정부는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, 미래 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·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하여 R&D 세제지원 강화

* 신성장·원천기술 지정 추이 : ('19년) 11개 분야, 173개 기술 → ('20년) 12개 분야, 223개 기술 → ('21년) 12개 분야, 235개 기술 → ('22년) 13개 분야, 260개 기술 → ('23년) 14개 분야, 270개 기술

- 그러나,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*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(91.5%)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

*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수(비중) : 434개 사(7.8%)(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

<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('19년)>

| 구 분 | 중소 | | 중견 | | 일반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|
| | 금액 | 비중 | 금액 | 비중 | 금액 | 비중 |
|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| 625억 원 | 11.1% | 249억 원 | 4.4% | 4,751억 원 | 84.5% |
| 일반 R&D 세액공제 | 19,971억 원 | 72.4% | 2,228억 원 | 8.1% | 5,377억 원 | 19.5% |

* 기획재정부, "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: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", '21.9월

- 신성장·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,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

-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가 유일
- * '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(조특법 제5조)'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 하였으나 상장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,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
-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·원천 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
- * 유사 입법례 :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'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조특법 제10조)'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적용

□ 건의내용

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
- (현행) 매출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⇒
(건의) 전체 중견기업 또는 매출 2조 원 미만 중견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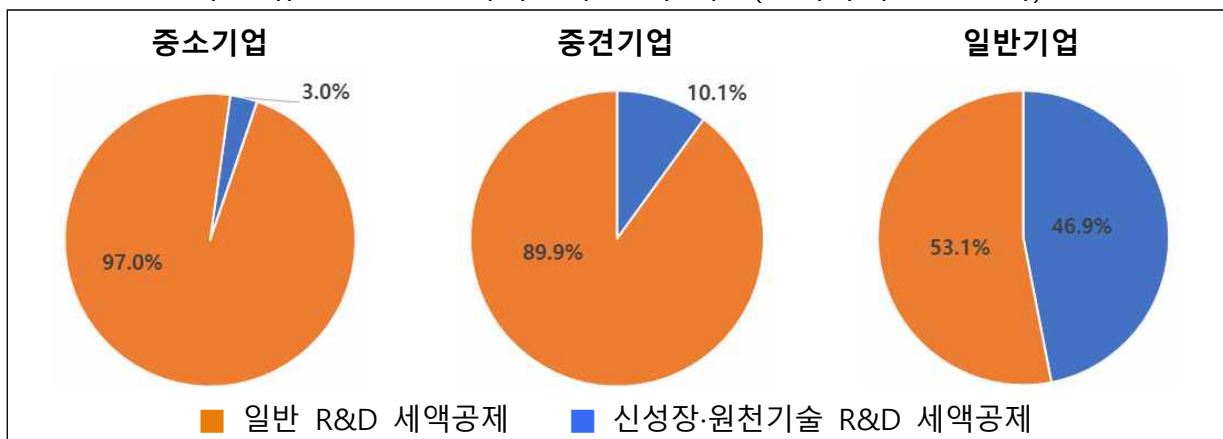
□ 현황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에 공통 비용이 있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
 - 인건비 및 위탁·공동연구개발비
 - ① 신성장 R&D와 국가전략기술 R&D 공통 시 : 신성장 R&D 비용
 - ② 그 외 경우 : 일반 R&D 비용으로 구분
 - 재료비 등 : 일반, 신성장,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 기준으로 안분
-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경우 3개 과세연도 동안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누적 생산량의 50%를 초과해야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세액공제 적용

□ 문제점

- 그러나 전체 R&D 세액공제에서 신성장 R&D가 차지하는 비중이 46.9%에 달하는 일반기업(대기업)과 달리 중소·중견기업의 신성장 R&D 비중은 각각 3.0%, 10.1%에 불과

< 기업 규모별 R&D 세액공제 금액 비중(조세특례 심층평가) >



- 중소·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규모가 작아*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전담인력 배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공통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인건비에 대한 R&D 세액공제 안분이 필요
 - * 중견기업 평균 R&D 인력(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: 12.0명(전체 인력의 4.6%)
- 특히 중견기업은 신성장-일반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 격차*가 크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공제금액**이 타 기업군에 비해 미미한 수준
 - * 중소기업 일반 R&D / 신성장 R&D 세액공제율/공제율 격차 : 25% / 30% / 5%
 - 중견기업 일반 R&D / 신성장 R&D 세액공제율/공제율 격차 : 8% / 25% / 17%
 - ** 기업 규모별 신성장, R&D세액공제 금액 : 중소 625억 원, 중견 249억 원, 일반 4,751억 원
- 또한,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상용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R&D 착수단계인 중소·중견기업이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요건*을 충족시키기 어려움
 - * 국가전략기술 생산제품이 3개 과세연도 누적 생산량의 50%를 초과할 것
- 중소·중견기업이 폭넓게 제도를 활용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&D 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공통 인건비도 재료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
-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중소·중견기업 사후관리요건 완화
 - (현행) 총생산량 대비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 비중 50% 이상 → (건의안) ① 대기업 50% 이상, 중소·중견기업 30% 이상
 - ② 중소·중견기업 일반 국가전략기술 생산 비중으로 안분하여 공제
 - * (예시)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제품 90%,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 제품 10% 생산 시 90%는 일반투자세액공제, 10%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급속한 기후변화 및 국가 간 교류 확대 등으로 인해 사스·메르스·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지속해서 출현하면서 국가적인 위기 초래

- 또한, 정부합동대책본부*까지 출범해 집중 방제를 해야 했던 ‘빈대’나, 목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‘외래흰개미**’ 등 해충 이슈도 증가

* 행안부, 보건부, 질병청 등 10개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구성('23.11월)

** '美서 年 3,300억 원 피해' 흰개미, 국내 출현(동아일보, '23.9.13.)

-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방역·방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정부에서도 “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”를 통해 연구와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,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*

* 코로나19 이후 소독업 매출액 성장률(통계청 서비스업 조사, '19년~'21년): 69.2%

- 해외 솔루션*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R&D 지원이 필요

* 국내 약으로 못 잡는 빈대...美 살충제, 정부 주내 긴급승인(중앙일보, '23.11.9.)

| 사례 | |
|--|--|
| ○ A사는 해충 내성에 대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먹이약제 로테이션 시스템을 개발, 식약처 등록 허가 인증을 받은 총 74종의 베이트 약제와 기타 300여 종의 약제를 개발 | |
| ○ 해충,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춘 시험기관을 갖추고 200여 명의 석박사 연구진으로 이루어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, 연간 R&D 투자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함 | |
| ○ 글로벌 해충방제 및 방역소독회사인 Rentokil, Ecolab, Rollins와 경쟁할 만한 국내 해충방제 및 방역소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이 필요 | |

- 환경·안전 및 인체 건강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, 국민의 보건후생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방역·방제 기술의 전문화 및 체계화가 시급

- 신성장·원천기술 중 바이오·헬스 또는 환경 분야 내에 방역·방제 관련 신기술을 포함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독려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에 방역·방제 기술 포함

* (예시)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개체(쥐, 해충, 사람 등)와 공간의 차단방역 기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10%, 중견 5%, 그 외 기업 1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,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공제율 상향*
 - *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: 중소 12%, 중견 6%, 그 외 기업 3%
 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: 중소 25%, 중견 15%, 그 외 기업 15%
-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%(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4%)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(기본공제의 2배 한도)
- 세액공제율이 1%p 확대되면 설비투자가 대·중견기업 8.4%, 중소기업 4.2%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시 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
 - * 대한상공회의소,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, '23.2월: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시(대·중견 7%, 중소 9%) 설비투자 증가율: 대·중견 59%, 중소 38%
- 특히, 중견기업은 투자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*된 이후 타 기업군에 비해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해 정책 실효성이 큰 것으로 추정
 - *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연도 투자 증가율('23, KDB): 대 -5.3%, 중견 9.8%, 중소 5.8%
- 중견기업의 53.9%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한 제도 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답해 지원 실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
 - *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(2023년 중견기업 투자 현황 조사): 법인세 인하 76.6%, 투자세액공제율확대 53.9% 입자환경 등 규제혁파 51.6%,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26.3% 등 順

□ 건의내용

-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
 - * [일반] (현행) 중소 10% 중견 5% 그 외 1% → (건의안) 중소 12% 중견 7% 그 외 3%
 - [신성장·원천기술] (현행) 중소 12% 중견 6% 그 외 3% → (건의안) 중소 18% 중견 10% 그 외 6%
 - [국가전략기술] (현행) 중소 25% 중견 15% 그 외 15% → (건의안) 중소 25% 중견 20% 그 외 15%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민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적('23년)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하여 시설 종류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 12~25%, 중견 7~10%, 대 3~6%를 공제(추가공제 10%)
-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'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.2%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물론 G20 경제성장률을 하회
 - * '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(OECD 중간경제전망): 전 세계 2.9%, G20 2.9%, 한국 2.2%
 - 특히, '23년은 고금리, 고물가, 고환율 등 3高로 경제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 1.3%를 기록했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·글로벌 금융위기·코로나19 등에 이어 역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
- 이런 상황 속에서도 '23년 중소·중견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, '24년 대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위축된 투자심리 해소에 주효한 것으로 추정

<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>

| 구 분 | 금액(조원) | | | 증가율(%)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| 2022 | 2023 | 2024(계획) | 2023 | 2024(계획) |
| 대 기 업 | 179.5 | 170.0 | 175.1 | △5.3 | 3.0 |
| 중견기업 | 30.1 | 33.0 | 34.4 | 9.8 | 4.3 |
| 중소기업 | 14.0 | 14.8 | 15.8 | 5.8 | 6.5 |

* KDB산업은행, 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

- 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, 다소 개선된 투자심리를 견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3년 연장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,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,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('25.12.31까지)
 - (기금출연) 기업이 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
 - (무상임대)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산 장부가액의 3%를 법인세에서 공제
 - (시설투자) 기업이 수탁기업*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7%, 중견 3%, 그 외 기업 1%를 법인세에서 공제
- *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 해당
- 그러나,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는 수·위탁 거래관계에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·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됨
 - 수위탁 거래에서 1차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은 대-중견-중소 기업 거래의 가교 구실을 수행하고 있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은 중간자인 중견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
- * 중견기업의 48.4%는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, 수위탁 거래 중견기업의 50.3%는 1차 협력사임 (중견련,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- 또한, 수탁 중소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, 위탁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, 수탁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

* 중소 7%, 중견 3%, 그 외 기업 1%

- 수·위탁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

□ 건의내용

- (시설투자) 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
 - (현행) 중소 7%, 중견 3%, 그 외 기업 1% → (건의) 모든 기업 7%
- (기금출연)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
 - (현행) 모든 기업 10% → (건의) 모든 기업 20%
- 상생협력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(협력중소기업, 수탁기업 등)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 상속 대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나 저율과세(10%)는 120억 원이 한도
 - * 각 과세표준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: 10억 원 이하 0%, 5억 원 초과~120억 원 이하 10%, 120억 원 초과~600억 원 이하 20%, 600억 원 초과 50%
- 중소·중견기업 경영자의 대다수는 경영노하우 및 기업가정신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*
 - * 주된 가업승계 방식(중소기업중앙회,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)
: 일부 증여 후 상속 58.9%, 생전 증여 32.2%, 사후 상속 7.1%, 기타 1.8% 順
- '22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저율과세는 120억 원에 불과해 제도의 실익이 부족하며, 실제 조세지출 규모도 상속보다 저조
 - * '23년 조세지출 전망(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): 가업상속 3,717억 원, 증여 1,198억 원
 -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가업상속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저율과세 규모로는 과세특례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
 - * 중견기업 상속세 예상세액(중견련, 2016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) : 100억 원 이하 23.5% 300억 원 이하 26.5% 500억 원 이하 14.7% 1,000억 원 이하 11.8% 1,000억 원 초과 23.5%
- 기업의 영속을 통해 국부를 이전하려는 입법 취지가 동일한 만큼 상속과 증여 사이의 차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승계 환경 조성

□ 건의내용

- (1안)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상속과 동일하게 공제로 확대
- (2안)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
 - (현행)~120억 원 10%, 120~600억 원 20%→(건의)~600억 원 10%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는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* 및 적용요건** 등을 확대 지원

* ('22년 개정) 100억 원→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 600억 원

** ('23년 개정) 사후관리요건 업종 요건 중분류→대분류

- 조특령 제27조의6 제8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의 상장* 또는 합병에 따른 상장**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납세자의 선택으로 10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 허용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(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)

*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)

- 조특법 상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된 것에 반해령 제27조의6 제8항은 100억 원을 한도로 해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발생

- '22년 개정 전까지 조특법 제30조의6과 조특령 제27조의6⑧의 특례 한도는 100억 원으로 동일

- 법령 간 일치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, 가업승계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족할 수 있게 정비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조특령 제27조의6⑧의 한도를 법과 동일한 금액(300~600억 원)으로 일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*로 증여세 과세가액(최대 600억 원)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%(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 20%)를 적용하고 한도 초과액은 누진세율(10%~50%) 적용
 - * 기업영위기간: (10년 이상) 300억 원, (20년 이상) 400억 원, (30년 이상) 600억 원
- 일시에 발생하는 납세 부담을 줄여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연부연납제도*를 운영 중으로 증여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이 용이치 않음
 - * (상속) :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: 10년간 분할납부(3년 거치 가능), 50% 이상: 20년간 분할납부(5년 거치 가능)
 - (증여) : 15년간 분할납부(거치기간 없음)
-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현재 20년 연부연납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,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이에 맞춰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승계에 있어 상속과 증여 간 과세형평을 추구

(예) 1천억 원을 증여받은 중견기업의 경우

○ 증여세 부담 세액 : 303.4억 원

- * 특례한도(600억 원) 세액: 12억 원(120억 원 이하 10%) + 96억 원(120억 원 초과분 20%)
- 특례 한도 초과분(400억 원) 세액: 195.4억 원(10~50% 누진세율)

○ 15년간 연부연납 시 매년 20.2억 원 납부(거치기간 없음)

- * 편의상 특례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계산
-

□ 건의내용

- 안정적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과 동일한 수준(최대 20년)으로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고용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,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작고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
 - 특히, 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**” 등은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,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**
 - * 청년,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% 감면(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%) ('26.12.31까지,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)
 - ** 중소→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: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,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,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
-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거나 초기 중견기업(매출액 3천억 원 미만)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72.0%*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
 - * [대기업 대졸초임] 5,084만 원(경총,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'21.10월 [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] 3,663만 원(중견련,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)
 - 또한,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
 - * 기업 규모별 제조기업 비중(통계청, '23.12월 행정자료 기준) : 중소 17.4% 중견 35.5% 대 17.3%
-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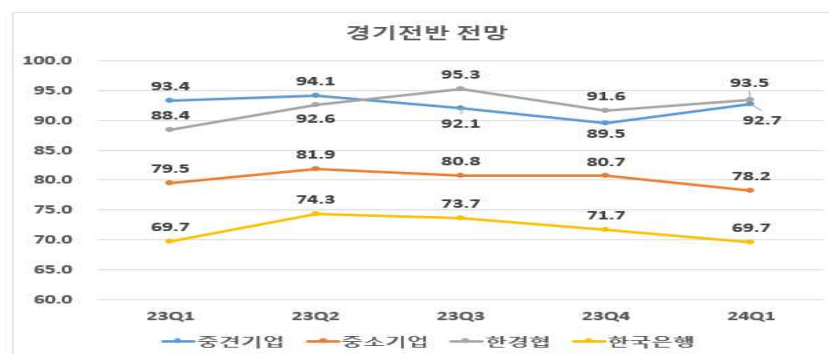
-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
 - * (예시)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소득세의 30% 감면(청년 등 50%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23년도 경기전망이 모든 기업군에서 고르게 100 이하를 나타내며 부정적 전망이 높았던 가운데 '23년 경제성장률 또한 1.4%*로 역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에 그치는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 지속

* 한국은행, '24.1.25.

< 기관별 경기전망 조사 >



- R&D 세액공제, 고용증대세제 등 상당수 조세특례제도의 '일몰'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어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연장 필요

<2024년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몰제도 현황>

| 법령 | 조문 | 일몰기한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
| 제10조 |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| ~'24.12.31.까지 |
| 제24조 | 통합투자세액공제 | |
| 제29조의6 |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| |
| 제29조의7 |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|
| 제104조의24 |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| |
| 제118조의2 |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| |
| 제28조의4 |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| |

□ 건의내용

- '24.12.31. 일몰이 예정된 세제지원을 3년 연장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AI,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 필요성이 대두
- 그러나 디지털 경쟁력 순위, 디지털 준비 지수 등 디지털 환경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, 기업의 디지털 역량은 하위권으로 나타나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

* 한경연, 디지털 역량의 국제비교와 시사점, '22.3월

- ① 디지털 환경 : 디지털 경쟁력 순위(IMD 발표) 64개국 중 12위,
디지털 준비 지수(CISCO 발표) 141개국 중 8위

- ② 기업 디지털 역량 : 클라우드 컴퓨팅 20개국 중 19~20위, CRM 20개국 중 20위

- 특히 중소·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16.7%, 중견기업 19.5%에 불과

-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(중앙회, '21.11월) : 자금지원(20.0%), 전문인력 확보 애로(20.0%), 디지털 전환 교육(20.0%), 인력 지원(13.3%) 順
-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(산업부·중견련, '21.12월) : 투자비용 문제(46.7%), 성과 불확실(38.4%), 전문인력 부족(32.3%), 관련 인프라 부족(23.1%) 順

- 일본은 '21년 세법을 개정하여 “디지털 전환 투자 촉진 세제 혜택”을 신설하고 DX 투자에 최대 5% 세액공제 또는 30% 특별상각을 지원

*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, 일본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, '21.10월

□ 건의내용

- 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

* (예시) DX 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지원, 가속상각 특례 적용

기타 세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를 취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*에 인력공급 용역을 포함('24.2월)

* 국선번호인 등의 법률구조, 기재부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·기술연구용역 등

- 최초 개정안은 근로자 파견·공급을 모두 추가하였으나 최종안은 파견을 제외하고,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범위*를 일부 수정('24.2.27.)

*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·수리,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

- 근로자 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경우 공급업체는 장비·자재 등 매입 시 발생하는 '매입세액공제'를 적용받지 못해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

- 사내하도급 관련 업종은 낮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순이익이 매출의 1%에 불과해 비용증가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

- 실제 HR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의 87.7%는 부가세 면세가 실행되면 비용증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애로·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, 87.2%에 달하는 기업이 면세 도입을 반대

*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업 부가세 면세에 대한 사업자 설문조사 '24.1월

사례

- 매출 1,000억 원의 공급사업자의 경우, 평균 매입세액공제율 17.8%*를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17.8억 원의 손실이 발생, 해당 업종의 평균 순이익이 1%(10억 원) 수준임을 고려하면 영업적자 전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
- 관련 기업 F사는 당초 안에서 근로자 파견이 제외되며 예상손실금액의 규모가 일부 축소 되긴 했으나, 단순 인력공급 규모도 상당하여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피력

- 사내하도급 거래형태가 기업 간 거래(B2B)임을 고려할 때, 비용증가를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워 공급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함

- 국내 사내하도급 인력 규모는 100만 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*, 관련 업종의 수익성 악화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

*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수 101.1만 명(전체의 18.1%)을 토대로 추정
(고용노동부,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, '23.9월)

- 이번 개정의 입법 취지는 인적용역 확대이나, 공급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 사용자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 비용에 큰 변화가 없어 용역 규모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

□ 건의내용

- 근로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재검토

* 시행('25.1.1. 시행 예정) 전 해당 기업 의견수렴 절차 선행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한 세부지침 마련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규 지정('22.7월부터 '23년 말)된 품목*에 대한 적용 기간이 '23년 말 개정을 통해 '25.12.31까지 연장
 - * 간장, 고추장, 된장 등 면세 미가공 식료품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)
-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해당 식료품 생산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 - 과세가 면세로 변경됨에 따라 면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공통매입세액공제* 및 의제매입세액공제**에 대한 불공제 금액이 급증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상 부담 가중
 - * 공통매입세액 : 과세·면세 겸영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필요
 - ** 의제매입세액 : 농·축·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·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를 제조·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금액 매입세액으로 공제

사례

장류전문기업 G사는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'22년(7.1~12.31) 50억 원, '23년 106억 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. 면세 이전 5% 이상이던 영업 이익률이 면세 이후('22년 하반기부터) -0.4%로 적자로 전환(약 8억 원)하였으며 '23년 적자 규모는 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- 물가안정을 위한 면세 취지는 공감하나 면세 식료품 생산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 마련 필요

□ 건의내용

-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 미가공 식료품* 범위에서 장류 삭제
 - * 데친 채소류, 김치, 단무지, 장아찌, 젓갈류, 게장, 두부, 메주, 간장, 된장, 고추장
- 면세 미가공 식료품 생산기업의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수출 비중 등 요건*을 충족하는 제조 중소·중견기업(매출 3천억 원 미만)이 물품 제조·가공을 위한 원재료 등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

* ①중견기업: 30% 이상, ②중소기업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

- 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, 공급망 재편, 3高(고환율, 고금리, 고물가) 등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'23년 수출실적 악화*를 겪었으며,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성 저하**를 유발

* '23년 수출실적 전년 대비 7.4%(509억 불) 감소(산업부, 2023년 연간 수출입동향)

** 한국 경제성장률(KOSIS): ('21년) 4.3% → ('22년) 2.6% →('23년) 1.4%

- 고환율 및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수출 활력을 제고할 필요
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공제가 아니라 납부 시기만 연기하여 세수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효율적
- 그러나,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%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탓에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제도 활용이 여의치 않음
- 해당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수출 중견기업의 18.9%(402개 사)*에 불과
- * '21년 말 기준 중견기업 중 수출액 등 재무데이터가 확보된 2,130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기업 수 산출

< 수출비중 구간별 중견기업 분포 현황 >

| 구 분 | 20% 미만 | 20% 이상~30% 미만 | 30% 이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수출비중 구간별 매출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| 976개 | 118개 | 402개 |

- 중견기업의 수출금액은 1,239억 불로 전체 수출금액의 18.2%를 차지하고, 수출 증가율이 타 기업군보다 높아*,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중견기업 적용요건을 완화해 수출 증가를 견인할 필요

* 기업 규모별 수출 증가율(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): 대 6.0%, 중견 11.8%, 중소 0.5%

□ 건의내용

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·중견기업 기준 완화
 - (현행)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 비중 30% 이상 중소·중견기업 → (건의)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 비중 20% 이상 중소·중견기업
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 신설
 - (현행) 중소 수출액 50억 원 이상 → (건의) 중소 50억 원 중견 100억 원 이상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중소기업*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최근 2년간** 「조세범처벌법」, 「관세법」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

* 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중소기업, 수출비중 30% 이상 중견기업

** 납부유예 요건 합리화를 위해 관세법 등 위반에 따른 적용제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('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, '24.1.23.)

- 「조세범처벌법」, 「관세법」 위반 외에도 최근 2년간 관세·국세 체납 사실 또는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
- 수출 제조기업은 원재료 수입 및 완제품 수출 과정에서 수백~수천 건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, 상표, 포장 등을 신고하며,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
- 관세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기업의 부당이익 추구 등 목적과 상관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
 - 타법과 달리 경고 혹은 시정조치 등 계도 과정이 없이 처벌이 이루어져 경미한 과실을 범한 기업의 구제가 불가
- *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하고,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,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(대외무역법 제33조의2)
- 관세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납부한 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극히 악화
 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전체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, 납부시점에 대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

| 사례 | |
|---|--|
| ○ H사는 비철금속 제련·정련 및 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,800억 원에 달하는 <u>연 매출의 80%를 수출이 차지할</u>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기업임 | |
| ○ H사가 '16년부터 '21년까지 수출입 신고한 페로바나듐과 관련해 중국산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오기된 것이 발견되어 관세법 허위신고죄로 담당자와 B사가 각각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함 | |
| ○ 해당 기간 H사가 페로바나듐 수출신고를 한 200여 건 중 원산지가 잘못 기재된 건은 일본으로 수출한 단 1건으로 담당자 착오에 의한 단순 과실이었으며, 일본은 FTA 미체결 국가이므로 원산지 오기에 따른 <u>관세 이득 등이 전혀 없었음</u> | |
| ○ 연간 영업이익이 31억 원에 불과한 H사는 관세법 처벌 사실로 인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을 받지 못해 <u>매월 15억~20억 원*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자금 유동성 애로 발생</u> | |
| - 부가가치세는 추후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 기간 소요되며, 비용 규모를 줄이고자 분기별 납부를 월별로 변경한 탓에 일선의 업무도 가중 | |
| *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시 매월 1~2억 원 납부 | |

- 경미한 과실에 대해 관세법상 제재는 부과하되, 부가가치세법 등의 수출기업 특례는 허용하여 부진한 수출 및 경제 현황을 타개할 필요
 -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'23년 수출실적 악화*를 겪은 수출기업에 세제상 편의를 제공하여 수출 활력 증진 도모
- * '23년 수출실적 전년 대비 7.4%(509억 불) 감소(산업부, 2023년 연간 수출입동향)

□ 건의내용

- 경미한 관세법 위반 시 시정조치 등 계도성 처분 우선 적용
- 경미한 과실*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한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허용
 - * (예시) 고의·상습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,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등
- 관세법 등 위반 사실이 있는 수출기업(수출비중 50% 이상)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2년간 한시적 허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 및 중견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제작하기에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, 관세를 감면(중소 70%, 중견 50%, '24.12.31까지)
 - * '23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39개 물품 신청
- 해당 제도 이용기업 다수는 일본·대만 등 FTA 미체결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가 높은 상황
 -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타 지원 정책에 비해 세수 부담이 적고*,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일몰 연장 시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에 예상됨
 - * '17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실적(한국기계산업진흥회) : 61억 원(중견기업 약 11.2억 원) 기타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모 :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5,641억 원, 생산성향상시설 3,614억 원, 환경보전시설 697억 원, 에너지절약시설 297억 원, 고용창출투자 243억 원 등
- 신청기업 대다수는 로봇, 제약 등 신산업을 영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제품 수입이 불가피하며, 타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시설과의 규격화 비용 발생 및 품질 저하를 우려

| 사례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사는 엔드밀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스위스, 독일, 미국 등 세 국가에서만 생산되던 제품을 국산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였으며, 현재 매출의 70%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 ○ 매년 10여 개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신청하여 감면받고 있으며, 감면대상물품은 주로 일본 및 대만에서 수입 ○ 100분의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절삭공구 시장은 높은 정밀도와 균일한 생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공장라인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위험부담이 큰 상황임 |

- 공장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를 통한 법인세 세수 확대에 기여

□ 건의내용

-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소·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 연장
 - (현행) '24.12.31까지 → (건의)'25.12.31까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관세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, 국내가격 안정,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부과(관세법 제71조)
 - 이를 위해 매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물품과 세율을 확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영
 - 기존에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 0%가 부과됐던 페로실리콘 품목이 '24년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업계의 세 부담 심화
 - 페로실리콘(FeSi)은 전기강판 제작에 필요한 품목으로 전기차 산업에 필수적이라 수요가 증가하였으나,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
 - 페로실리콘 생산 원가의 50%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하는 가운데, 국내 전기요금 상승*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직접 생산이 어려움
- * kWh당 산업용전기요금(한전): ('21년)105.48원 → ('23년 상반기)146.79원, 39.2% 상승
- 중국산 페로실리콘은 한·중 FTA로 인해 관세 0%가 적용되나, 저품질 제품이 많고 중국의 경제 상황과 대외환경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

사례

- C사는 전기강판 생산을 위해 연간 2만 4천 톤에 달하는 페로실리콘을 수입
- 과거 중국산에 의존했으나 중국 전기자동차 업황 및 미·중 갈등 등에 따라 원재료 공급이 불안정해, 신규 공급처를 모색했으며 브라질기업과 협업하여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안정적으로 수입
-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어 브라질산 페로실리콘에 대한 관세(2%)가 적용될 경우, 연간 15억 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이 생기며, 현재 불황인 철강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더욱 악화할 전망

□ 건의내용

- 전기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페로실리콘 포함
 - 전체 포함이 어려운 경우, 고순도 페로실리콘에 대해 구분 적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는 지난 10년간 47.8조 원에서 128.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, 동 기간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2.5%로 증가

<소득세수 현황>

(단위: 조원)

| 구 분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국세 | 201.9 | 205.5 | 217.9 | 242.6 | 265.4 | 293.6 | 293.5 | 285.5 | 344.1 | 395.9 |
| 소득세 | 47.8 | 53.3 | 60.7 | 68.5 | 75.1 | 84.5 | 83.6 | 93.1 | 114.1 | 128.7 |
| 비중(%) | 23.7 | 25.9 | 27.9 | 28.2 | 28.3 | 28.8 | 28.5 | 32.6 | 33.2 | 32.5 |

* 국회예산정책처, 2023 대한민국 조세

-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, 소득세 부담에 대한 조정이 없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

<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>

| 구 분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 등락률(%) | 1.3 | 0.7 | 1.0 | 1.9 | 1.5 | 0.4 | 0.5 | 2.5 | 5.1 | 3.6 |

* 통계청, 소비자물가조사

- 소득세법은 '22년 일부 과표를 조정*하였으나 하위 구간에 한정되어 있고, 이후 폭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근로자의 실익이 부족

* '22년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내용

(개정 전) 1,200만 원 이하 6%, 1,200만 원 초과~4,600만 원 이하 15%, 상위 구간 동일
 (개정 후) 1400만 원 이하 6%, 1400만 원 초과 5,000만 원 이하 15%, 상위 구간 동일
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*처럼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근로자 가처분소득을 증대할 필요

* 국내 총생산액의 0.5%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(공정거래법 제31조)

□ 건의내용

-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(이하 가산세)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

* 국세기본법 시행령 §27의 4

-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적용*하고 있어 가산세가 징벌적 성격이지만 연 8.03%를 부과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음

* 국세기본법 시행령 §43의 3

□ 건의내용

-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이자율 완화